

## 제179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4.08.21



# 발전노동자

- ☐ 민주노조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가짜정상화 분쇄
- ☐ 경영평가 무력화
- ☐ 해고자 원직복직

## 아프리카에는 에볼라가, 발전에는 직권조인이 상권!

- ☐ 06/26 남동노조 단체교섭에서 복지축소 잠정합의
- ☐ 06/30 동서노조 노사협의회에서 복지축소 직권조인
- ☐ 07/14 서부노조 노사협의회에서 복지축소/퇴직금 삭감 직권조인
- ☐ 07/24 남부노조 단체교섭에서 복지축소 직권조인
- ☐ 07/30 동서노조 노사협의회에서 퇴직금 삭감 직권조인
- ☐ 08/07 남동노조 노사협의회에서 퇴직금 삭감 직권조인



올해초 5개 기업별노조는 ‘발전연대회의’를 결성하고 힘찬 결의를 다졌다. 박근혜정부의 가짜 정상화에 맞서 복지제도를 사수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6월 말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정치인의 공약보다 못한 것이었다. 배신의 신호탄은 남동에서 쏘아올랐다. 남동노조가 가장 먼저 약속을 깨고 복지축소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하자, 동서노조가 이에 질 수 없다며 남동 투표전에 아예 직권조인을 해버렸다. 그러자 서부노조는 복지축소를 넘어 퇴직금 삭감까지 합의함으로써 최고의 용맹을 보여주었다. 남부노조가 허둥대며 뒤늦게 복지축소에 합의하자마자, 동서노조와 남동노조는 “퇴직금만은 기필코 지키겠다.”던 조합원과의 약속을 또 다시 팽개치고 직권으로 퇴직금 삭감에 동의했다. 동서에서 시작된 직권조인이 전염병처럼 나머지 기업별노조로 퍼져가고 있다. 최근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데, 발전현장에 퍼져가는 이 병은 누가·무엇으로·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 남부노조의 투표총회, 직권조인의 반성이길...

지난 8월 18일 남부노조가 『퇴직금 제도변경(안)』에 대한 찬반투표총회를 공고했다. 8월 12일자 성명서(노사신뢰 파탄내는 개별동의계획 취소하라!)를 통해 “발전노조측이 제시한 ‘퇴직금 제도 변경거부 동의서 위임’과 ‘전직원 총투표실시’에 대해서...(중략)...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부논의가 중단된 상태임을 밝힌다. 전직원 총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결의 위험성도 염두에 두고...(중략)...노동조합이 면피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고 했던 남부노조가 뒤늦게나마 발전노조의 대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리고 남부노조의 금번 투표총회가 지난 날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기를 바라며, 조합원들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2면 계속 ➡>

첫째, 금번 투표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금 삭감 반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남부노조가 그토록 우려하는 ‘가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며, 노동조합의 책임지는 모습이다. 회사는 이미 현장 설명회를 통해 그릇된 정보와 협박으로 조합원을 충분히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총회를 공고한 채 노동조합이 올바른 정보 제공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야말로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부노조는 투표 공고후 3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하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지침 하달과 점검이 필요하다. 8월 20일에 남부노조 삼척화력지부의 모조합간부가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금번 찬반투표에 대한 안건설명회를 했다. 어떠한 자료도 없이 오로지 구두로만 진행된 설명회에서 그 조합간부는 “퇴직금 삭감의 반대급부로 퇴직시점을 3월/9월에서 6월/12월로 늦추고, 상여금 100%를 기준임금화하기로 했다. 퇴직금 삭감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것이 남부노조의 입장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삼척화력지부 조합간부의 발언은 사측의 사주하에 행해진 일탈행위이며, 반조직적 행위이다. 즉각적인 조치와 단속이 필요하다.

셋째, 공동 투·개표 등 발전노조와의 공동 대응이 유리하다. 발전노조는 그간 퇴직금 제도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냈으며, 공고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부노조 조합원들에 비해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퇴직금 제도 변경(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게 나올 것이다. (이것은 남동의 단체협약 개정(안) 찬반투표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남부노조가 발전노조의 선전전에 합류하고, 공동 투·개표를 진행한다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사측의 퇴직금 삭감 의지를 꺾을 수 있다.

## 허언장담[虛言壯談]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거짓 허, 말씀 언, 씹씹할 장, 말씀 담)

서부/동서/남동노조가 조합원과의 약속을 깨고 퇴직금 삭감에 이미 합의했다.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의 압박도 거세다. 각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퇴직금 삭감의 조건으로 이런저런 반대급부를 준단다. 그런데 실체가 없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처럼 퍼져나갈 뿐, 누구도 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 소문의 진원지는 분명히 기업별노조 조합간부들인데, 그들도 합의서를 본 적이 없단다. 회사가 약속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기도 한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쨌거나 믿어 달란다. 그 옛날의 어느 대통령처럼...

문득 의문이 든다. 기업별노조 조합간부들이 순진한건지, 알고도 거짓말하는 건지...가짜 정상화의 본질은 임금의 전반적인 하향이다. 어떤 조건의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조삼모사일 뿐이다. 복지축소와 퇴직금 삭감이 완료되고 나면, 낮아진 그 수준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꿈수는 없다. 정부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이면합의는 안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나중에라도 이면합의가 들통나거나 실행하려 하는 경영진이 있다면 분명히 목이 날아 갈 일이다. 어느 경영진이 노동조합과의 막연한 구두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을 걸겠는가? 지금의 복지축소와 퇴직금 삭감 시도가 결국은 경영진의 자리 보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잊었는가?